

월요광장

클래식과 대중성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 관람을 위해 운암동 문화예술회관에 갔다. 홀 중앙의 티켓박스로서 예매해 둔 입장권을 찾았다. 점점 나빠지는 시력 탓에 1층 앞쪽 자리를 선호하는데, 영화관에 서처럼 프라임존에서 비껴난 앞쪽 좌석이 오히려 저렴하다. 세 단계로 나뉜 티켓 가격에서 제일 비싼 R석이 3만 원, 중간인 S석이 2만 원, 가장싼 A석이 1만 원이다. 이런저런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A석의 경우는 영화 한 편 관람하는 가격에도 미치지 않는다.

서극 없이 곧바로 협주곡 연주가 시작되었는데 바이올린 협연자인 윤소영의 연주를 보고 듣는 것이 이날 연주회 감상의 개인적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작은 체구에도 당당한 매너로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연주력을 과시하는 그녀의 모습이 흡사 여성 로커처럼 느껴진다. 윤소영과 같은 세계 정상급 솔로리스트와 광주시향 정도 되는 실력 있는 대규모 관현악단(이날 연주자만 총 70명이 넘었다)의 실연을 즐기 위해 최고 3만 원 이내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은 광주 시민으로서 누리는 호사가 아닐 수 없다. 대중음악계의 유명 가수나 연주자들이 광주에서 콘서트를 열어도 티켓 가격이 십여 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던가.

이날 연주된 브람스의 낭만적 작품들은 인지도 면에서나 청취의 난이도 면에서나 아주 '대중적'이었다. 우리가 보통 '대중음악'과 구별하여 '클래식'이라고 일컫는 서양 근대음악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대중음악이다. 클래식은 서양의 절대왕정 체제에서 시민사회로의 전환기에 아마추어 연주 문화의 확대와 악보 시장의 성장, 입장권을 판매하는 대중 음악회(public concerts)의 확산 등과 같은 음악의 상업화와 대중화를 배경으로 성장해 온 음악이기 때문이다. 클래식은 '대중음악'과 구별되는 일종의 '고급 음악'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19세기말과 20세기 이후로 최근의 일이다. 이와 같

은 '고급-저급'의 음악적 분열은 사실상 근대 이전의 신분사회, 봉건적 구체제로 되돌아가는 것과 닮았다.

하버마스가 '공공성의 재봉건화'라고 비판했던 이러한 분열 상황에서 벗어나 클래식의 초심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클래식 스스로 속물화된 '고급음악'으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대중적 소통의 다양한 장구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음악에서 대중성과 공공성(양자는 사실상 동의어다) 그 자체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대중음악'으로 지칭되는 음악들은 과연 대중성이 있을까? 오늘날 '대중음악'에서 대중성이란 중앙 미디어 권력과 독점적 대형 기획사들에 힘입어 몸값을 키운 가수들이 전국 방방곡곡 축제의 현장에서 행사하는 '대중 동원력'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깊어 가는 광주의 가을, 주말마다 확성기로 뿜어져 나오는 도시 축제의 다양한 소리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그 소리 풍경에는 '바람직하고 조화로운 소리'에 대한 누군가의 요구가 담겨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음악적 공공성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그저 참

여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대중 동원의 선전 기능에 머무는 것인지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음악의 공공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교향악 양식은 간과할 수 없는 모델이다. 서양 근대의 산물인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유지해 왔듯이, 이 서양의 근대적 음악 양식 또한 역사적으로 '시민들의 자기 선언'이라는 함의를 담아 왔기 때문이다.

'시향'(市響)은 한자어 조합을 통해서도 '도시의 소리 풍경'은 은유한다. '광주시향'은 어떤 다른 '광주의 소리 풍경'을 은유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11월 정기 연주회에서 광주시향은 말리의 교향곡 1번을 연주한다고 한다. 말리의 교향곡은 약기 편성의 규모와 음량 면에서 이미 '대중적'이다. 그것은 블루버스터 영화를 보거나 록밴드의 헤비메탈 사운드에 빠져드는 것과 비슷한 체험을 청중에게 안겨 준다. 100명에 가까운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서 확성기도 없이 들려주는 강렬한 어쿠스틱 사운드는 또 다른 도시의 소리 풍경을 펼쳐 보일 것이다. '대중 동원력'이 아닌 음악의 '대중성'은 그와 같은 소리 풍경 안에서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기고

지역의 위험을 미리 찾아내 사고를 예방하자



김랑일 한국안전교육센터 교수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각 구청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추진단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광주 지역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해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 점검은 재래시장을 비롯한 대형 마트, 백화점, 노래방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을 비롯하여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가 많았던 고시원, 요양병원, 극장, 아파트 등을 순회하면서 불법 건축물 운영, 소방 설비·시설 유지 관리, 배전 및 전기 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안전 점검은 현장에서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도하며 개선 방

향을 제안해 주기 위한 것인데도 기관에서 점검을 나왔다고 하면 위법 사실을 적발할 목적으로 착각하는 건축주와 안전 관리자를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위안이 되는 것은 고객의 안전이 영업의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솔선수범해 일일 점검을 실천하고 수시 순찰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주를 만날 때이다. 또한 대형 화재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비단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는 건축주도 많았다.

'위험 사회'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독일 뮌헨 대학의 울리히 벡 교수는 OECD 회원 국가 중 안전사고 발생률 1위이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1위인 대한민국 안전 관리 실태의 문제점이 뭐냐는 질문에 "법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사람의 의식이 변화되기 이전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

총복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시의 세종중앙 병원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즐비하다. 전문 면허를 갖춘 업체에 안전 점검을 맡기고 있지만, 건축주와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자들은 365일 긴장을 풀지 말고 안전 점검에 주력해야 한다. 안전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전기 기구와 가스 설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일상 속에서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 점검과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화재 발생시 생명 통로라고 일컫는 비상구의 방화문 개폐 여부 점검과 비상 계단의 피난을 방해하는 적재 행위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다. 육상으로 대피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방화문이 굳게 잠겨 대피로를 막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규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많다.

벌금이나 행정 명령이 두려워서 안전 업무를 이행하기보다는 고객의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하

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소방 안전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 보니 올바른 피난 방법을 몰라 연기에 질식사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아주 많았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왜 신속도 안 했느냐? 공무원은 무얼 했느냐?"며 사고 책임을 관련 기관에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운영 하는 상가, 점포, 사업장의 안전 관리 책임자는 자기 자신이며, 고객의 생명을 지키려는 자세로 영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제2의 밀양, 제천 참사와 같은 위험이 득비섯처럼 자라고 있다. 위험 요소를 찾아내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광주-전남을 만드는 데 시민들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보이는 위험을 지나치고 외면해 버리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져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 가고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고

목포는 항구다



서채수 전남재향경우회 사무처장

"영산강 안개 속에 기적이 울고/ 삼학도 등대 아래 갈매기 우는/ 그리운 내 고향 목포는 항구다."

목포가 낳은 당대 최고의 가왕(歌王) 고(故) 이남영 가수가 80여 년 전에 발표했던 국민 애창곡 '목포는 항구다'의 가사 일부이다.

목포는 개항 이후 일제 수탈 기지로 급성장하여 1940년대 인천, 부산에 이어 3대 항으로 번성했다. 삼입 도시로 변모하며 한때는 전국 6대 도시로 강성했다. 그러나 일본, 중국 등과의 교역이 끊기면서 무역항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목포항의 성장도 멈췄다. 개항 120여 년, 목포시 승격 70년의 유구한 세월이 흘렀건만 화

려했던 지난날 영화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채 소외되고 정체된 도시로 변해 버렸다.

지리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내항의 수심이 얕으며 영산강 강상류로부터 유입되는 다량의 퇴적물 등으로 인해 대형 항만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편으로 DJ를 배출했다는 점 때문에 수십 년간 정권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그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받고 발전과 비전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동안 목포 시민과 회로애락을 함께하며 목포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던 보혜, 조선내화 등 중견 기업체들도 타 지역으로 옮겨 가고 이제는 변변한 공장 하나 없이 소비 도시로 변해 버렸다.

힘들고 짜든 삶 속에서도 목포는 정이 유독 많은 도시이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짙짙한 바다 내음이 어우러진 전득 전득한 정감이 도시 곳곳에 배어 있다. 목포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예향이다. 박화성, 김우진, 차범석, 이남영, 남봉 등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다. 이들의 자취와 흔적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

아 있어 근대적인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목포는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곳이 많은 맛과 멋의 도시이다. 어느 식당을 가도 맛만큼은 만족하고 어느 곳을 가도 볼거리가 많은 맛과 멋이 넘치는 도시이다. 목포만이 지니고 있는 소박하고 정겨운 운치로 매력 넘치는 도시이다. 한동안 맛과 맛, 매력을 깎벌 속에 묻혀 둔 채 잠자고 있던 목포가 긴 잠에서 깨어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6일 유달산에서 고하도를 잇는 국내 최장 거리 해상케이블카가 개통했다. 그림처럼 펼쳐지는 다도해의 비경, 유달산의 기암괴석과 절경, 학의 날개처럼 곧게 뻗은 목포대교너머로 떨어지는 금빛 낙조는 보는 이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환상과 황홀의 뷰이다. 케이블카 개통과 함께 이제 목포는 1000만 관광 도시를 꿈꾸며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생산 기반이 취약한 목포는 관광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복합 리조트와 가족레저형 여가 활용 관광지 등 글로벌 관광 명소를 연계해 조성하고 대형 호텔, 쇼핑몰, 인피니티 수영장과 공연장, 전시장, 컨벤션센터 등도 절실하다. 짜릿한 이벤트,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목포에는 숙박 시설이 아주 부족하다. 요즘 주말에는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밤방 구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때문에 숙박 시설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한다. 이와 더불어 깨끗한 거리 조성,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함 손님맞이 등 성숙한 시민 의식과 유관 기관의 발 빠른 관광시책 발굴, 민관 통합형 협력 체제 구축 등도 매우 중요하다. 가까운 진도, 신안, 해남 등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관광 자원과 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숙박형 여행객을 유치하여 관광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한데 모아질 때 1000만 관광 도시로의 도약과 목포의 새로운 부흥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개도국 지위 포기 우리 농업 대책은 있는가

정부가 앞으로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위기에 처한 농촌 현실과 농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간 유지된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저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이미 확보한 특혜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 "군인소득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이런 결정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국가가 된 우리나라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로 인해 향후 협상에서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특혜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51.3%인 수입쌀 관세는 최대 15.4%까지 낮춰야 하고 보조금도 5년간

최대 45%까지 줄여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계의 거센 반발은 당연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결정은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농민들의 주장처럼 농업은 이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농자재 값은 매년 오르는 데도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며, 농업 소득은 2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피해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농도 전남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업 예산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농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5·18 진상 조사위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단 연내 진상조사위 출범에 진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여야의 물밑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달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이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 한국당이 곧바로 위원 추천에 나선다면 국회 내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위원 재추천 요구를 1년 이상 미루며 사실상 진상조사위 출범을 막아왔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

과한다 해도 즉각적인 조사위원 추천에 나설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5·18 진상조사 특별법을 최초 발의했던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은 "특별법을 발의한 지 2년 3개월 만에 진상조사위 출범의 길이 열렸다"며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연내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만큼은 한국당이 진상조사위 출범에 어긋장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전례없는데 안 될 일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강석(광주 서구) 의원은 이미 지적한 바, 한국당은 지난 40년간 진상규명을 염원해 온 국민들께 더는 부끄럽지 않도록 관련 예산 삭감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진상규명위 출범 및 향후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선의 선조는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이 끝나자 공적에 따라 상을 내리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이순신을 비롯해 권율·원균 등 모두 18명이 공신의 칭호를 받았다. 선무공신은 무공을 세운 공신을 뜻한다.

문제는 칠천량해전에서 조선의 수군을 궤멸에 이르게 했던 원균이 이순신과 동일한 급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조가 자신의 피난길에 동행했던 86명에게 호성(護聖) 공신 칭호를 하면서 정작 선전화법을 위

하'로 막을 내렸는데 전세가 불리해진 것을 안 측근의 배신 때문이었다.

최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TF'에 표창장을 수여한 데 이어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일명 '논공행상'을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올바르게 정치 저항에 앞장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논리를 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수사에 대해 줄곧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다. 그러

면서 정작 선전화법을 위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당의 의원들에게는 상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선조에게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 간 군주라는 오명이 따른다. 역사학자들 간에는 선조의 몰락이 잘못된 논공행상에서 비롯됐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논공행상으로 촉발된 이괄의 난은 이후 국력이 쇠약해진 탓에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게 하는 발미를 제공했다. 특권만 있고 의무는 방기하는 행태는 공정과 정의를 해하는 적폐다. 표창장과 가산점으로 대변되는 한국당의 논공행상은 부패망으로 돌아올 것이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논공행상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                   |                           |                         |
|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팀                     |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4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52   | 체육부 220-063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